

【특집】

대화의 평화적 구조*

이찬수 (서울대학교)

국문요약

대화는 상이한 입장들이 언어적으로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다. 합의 이후 그 합의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과정도 넓은 의미에서 대화의 영역에 속한다. 설령 대화가 반드시 합리적 합의와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대화와 합의는 어떤 식으로든 갈등을 줄인다. 갈등이 줄어드는 그만큼 평화도 모습을 드러낸다. 대화 참가자들 간의 접점이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늘리는 계기가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평화의 길을 기대하면서, 대화란 무엇이며, 대화가 어떤 식으로 평화에 공헌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부버(Martin Buber), 가다머(Hans-Georg Gadamer),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등의 입장을 빌려온다. 특히 하버마스의 주요 이론, 즉 합리적 '의사소통'과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 그리고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세계'와 전략에 의해 조종되는 행정 영역인 '체계' 이론을 평화적 대화의 과정에 적용해본다.

이러한 대화의 정치사회적 사례로 '아일랜드헌법회의', '제네바합의', '7.4남북공동성명', '햇볕정책' 등의 각종 국내외적 합의들을 각각의 맥락에 맞게 살펴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중재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북미 대화의 중재자로 기여하려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통해 대화가 평화에 기여하는 과정과 논리를 '대화의 평화적 구조' 및 '평화의 대화적 구조' 차원에서 정리한다.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61-A00017).

주제어: 대화, 평화, 의사소통, 전략, 중재자, 회복적 정의

I. 들어가는 말

평화는 흔히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어떤 형태든 폭력이 없어본 적은 없다. 물리적 폭력은 축소되어가고 있지만, 성과지향적 신자유주의 사회에 접어들면서, ‘힘’을 키우기 위한 경쟁이 일상화하고, 그만큼 폭력은 더 구조화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내면화한다. 그런 점에서 폭력이 없는 상태라는 평화 규정은 지금 이 이상적이거나 희망적인 정의일 뿐이다. 좀 더 현실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그 대안 중의 하나가 평화를 ‘폭력을 줄이는 과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²⁾

폭력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폭력은 더 큰 힘이 작은 힘을 위협하거나 억압해 피해와 아픔을 주는 행위이다. 힘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크기가 폭력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힘들 간에 다툼이 아니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누군가 어디선가 겪는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그런 아픔이 없는 세상을 희망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상황과 형편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럴 때 힘의 차이가 갈등보다는 조화로 이어진다.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근본적인 길은 당사자들 및 관계자들 간의 대화이다. 대화가 폭력을 줄이는 길에 들어서면 동력인

2) 이찬수, 『평화와 평화들: 평화다원주의와 평화인문학』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6), pp. 84-86; 李贊洙, “平和はどのように成り立つのか: 減暴力と平和構築”, 『リーラー「遊」』 vol.10 (東京: 文理閣, 2018), pp. 65-88.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평화에의 길을 기대하면서, 대화란 무엇이며, 대화가 어떤 식으로 평화에 공헌하는지, 부버(Martin Buber), 가다머(Hans-Georg Gadamer),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등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 아일랜드헌법회의, 제네바합의, 남북적십자회담, 7.4남북공동성명 등 국내외에서 있었던 정치사회적 합의들을 의미 있는 대화의 사례로서 맥락에 맞게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대화는 한결같이 ‘합의문’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대화는 상이한 입장들이 언어적으로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합의 이후 그 합의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과정 역시 넓은 의미에서 대화의 영역에 속한다. 대화는 단순히 실천과 무관한 언어적 수단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대화가 반드시 합리적 합의와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대화와 합의가 어떤 식으로든 갈등을 줄이고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 분기점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대화 참가자들 간에 찾아진 ‘접점’이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늘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전술한 사상가들의 이상적 대화론이 현실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관계도 살펴볼 것이다.

II. 대화의 정의와 논리

대화의 한자 상 의미는 ‘마주하고(對) 이야기하기(話)’이다. 고대 그리스어에 기반을 둔 영어 dialogue는 ‘통하여/사이에서/교차하여(dia) 말하기(logos)’이다. 한문이든 영어든 두 사람 이상의 언어교환을 의미한다.

대화는 두 가지 말의 교환 과정인 것이다. 두 가지 말은 두 가지 맥락에서 나왔기에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은 그 차이가 드러나는 과정에 차이 혹은 그 조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두 말의 교환 과정에 차이와 차이의 조건에 대해 이해하면 점점이 잉태된다. 그만큼 갈등도 극복된다. 차이의 인정과 이해에 기반한 점점의 잉태, 산출, 확대가 좁은 의미에서 대화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 존재론적 규정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려면 한편이 말할 때 다른 편은 들어야 한다. 말하고 듣는 주체가 상호 순환적이어야 한다. 말하고 듣는 과정에 오해가 유발되기도 하지만, 점점이 형성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대화는 내가 ‘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 의해 제대로 이해되기를 바라는 상호적 행위이다. 대화 과정에서 ‘너’는 나에게 의해 이해되는 만큼만 ‘너’이다. 마찬가지로 대화 행위에서 ‘나’는 나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 의해 이해되는 만큼만 ‘나’가 된다. 대화에서 너 없는 나, 나 없는 너란 있을 수 없다. 대화에서 나를 규정해주는 것은 너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철학자 우에다 시즈테루(上田閑照)는 대화에서 자기의 존재방식은 자기가 ‘종’(從)이 되고, 상대를 ‘주’(主)로 삼는 데서 성립된다고 말한다.³⁾ 대화는 그저 말마디만 오가는 행위가 아니고 단순한 정보 전달도 아니다. 근원적 차원에서 보면, 대화는 상이한 주체의 교환 행위이다. 주체의 교환 행위에서 내가 나로 존재하게 된다. ‘언어는 존재의 집’⁴⁾이라는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관점에 충실한 규정이라고

3) 上田閑照, 『禪佛教-根源的人間』(東京: 筑摩書房, 昭和 48), pp. 156~157.

할 수 있겠다. 말하며 사는 인간의 존재 방식은 ‘대화적’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대화의 자세는 철학자 마틴 부버(Martin Buber)가 말한 ‘나-너’(Ich-Du)의 관계와 ‘나-그것’(Ich-Es)의 관계에서도 잘 보인다. 부버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근원적인 언어는 ‘나-너’이며, 그러한 언어는 나의 온 존재를 기울이고서만 가능하다. 내가 온 존재를 기울일 때에야 내 앞의 대상은 ‘너’가 되며, 그 ‘너’로 인해 ‘나’도 비로소 ‘나’가 된다.⁵⁾ ‘나’ 자체란 없다. 진정한 나는 너와의 관계성에서만 나가 된다.

“태초에 관계가 있다”는 말마따나,⁶⁾ 인간은 독자적 혹은 개별적 존재가 아니다. 유아가 부모와 대화하며 아이로 성장하고, 학생은 선생을 전제하는 개념이며, A가 B, C, D...와의 관계 안에서 비로소 A로 기능하고 존재한다. 이처럼 근원적 차원에서 나는 너를 내 안에 들이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대화는 주체의 상호 전이이며, 인간이 자신의 본래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2. 해석학적 지평

대화는 자신과는 다른 언어를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변화의 상황 속에 놓여있는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새로운 이해를 위해서는 타자의 새로운 언어를 수용해야 한다. 이 때 새로운 언어의 주체인 타자를 단순히 자신의 수단이나 도구로만 여기지 않고, 나와 다른 그대로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대화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청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대화는 ‘다름’이 ‘틀림’으로 와전되지 않고 다른 그

4) Martin Heidegger, 신상희 역, 『숲길』 (파주: 나남, 2008).

5) Martin Buber, 표재명 역, 『나와 너』 (서울: 문예출판사, 1988), p. 6, p. 17.

6) 위의 책, p. 25. 이 번역서에서는 ‘처음에 관계가 있다’로 되어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문맥에 더 어울리게 ‘태초에 관계가 있다’로 표현했다.

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 다름 속에서 공통 지점을 파악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공통 지점은 대화 상대자가 처한 현실과 기본자세에 따라 결정된다. 해석학적 철학자 가다머(Hans-Georg Gadamer)가 ‘친밀성’과 ‘소원성’의 양극에서 ‘해석’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⁷⁾ 그 핵심은 저마다의 ‘선이해’(preunderstanding)에 있다. 이때의 선이해는 편견(bias)이나 혐의의 부정적 선입견(prejudice)과 동의어는 아니다. 가령 ‘편견’이 신념, 감정, 행동의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인데 비해, ‘선이해’는 역사적 전승이 해석자 안에서 만나 끝없이 형성되어온 인식의 지평을 의미한다. 이미 주어져 있던 인식의 지평에 근거해 새로운 텍스트 혹은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⁸⁾

모든 해석은 선이해에 기반한다. 선이해가 해석을 방해할 수도 있지만, 선이해 없는 해석은 불가능하다. 모든 해석은 자신의 선이해적 지평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해의 과정도 품고 있지만, 그러한 오해 없이는 이해도 불가능하다. 이해는 일정 부분 오해를 함축한다. 오해를 품고 넘어낸 이해, 그러한 ‘창조적 오해’를 통해 다른 맥락에서 나온 말들이 일정 부분 ‘합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소통(communication)’이 ‘더불어(com)’ 하나가 되는(uniō) 행위라면, 두 말의 합일을 지향하는 대화는 의미상 소통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두 말의 거리가 멀면 그 만큼 만남이 가져다주는 도전적 의미도 크다. 물론 거리가 너무 멀면 대화의 자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대화는 다름 속에서도 무언가 상통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의 거리에 있을 때, 무엇보다 그 다름이 서로에게 아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7) John M. Connolly & Thomas Keutner, 이유선 역, 『해석학과 과학』 (서울: 민음사, 1993), p. 51, pp. 107~108.

8) Hans-Georg Gadamer, *Truth and Method* (New York: Crossroad, 1982), pp. 235~240.

있을 때, 아픔이 아니라 조화와 일치라는 유용한 의미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하게 된다.⁹⁾ 그런 점에서 대화는 오해에서 오는 아픔의 치유와 그 이전으로의 회복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Ⅲ. 소통적 행위와 전략적 행위

이 글의 관심사 중 하나는 이러한 선협적 차원의 대화론이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있다. 아무리 ‘태초에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대화론이 그 자체로 평화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화가 평화에 공헌하려면 인간 존재의 대화적 구조를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다. 현실은 하버마스가 말하는 ‘의사소통 행위’ 보다는 ‘전략적 행위’로 인한 갈등이 더 지배적이다.

주지하다시피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인간 존재의 대화적 구조를 의식하면서 그 구체화를 위한 ‘의사소통 행위론’을 펼친 바 있다. 의사소통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합의해가는 합리적 과정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이 인간의 사회생활과 사회구성 및 사회형성의 근간이다.¹⁰⁾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대방에게 나의 영향력을 일방적으로 미치게 하려는 행위가 더 빈번하다. 하버마스는 이런 행위를 ‘전략’이라고 부른다. ‘전략’은 나의 영향력을 상대방에게 미치고 확대시키기 위한 행위이다. 상대가 나의 의도에 맞는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수단도 전략

⁹⁾ 이찬수, 『불교와 그리스도교 깊이에서 만나다: 교토학파와 그리스도교』 (서울: 다산글방, 2003), p. 159.

¹⁰⁾ 장춘익, “하버마스: 비판적 사회이론의 정립과 정치적 실천의 회복을 위한 노력”, 『사회비평』 11 (1994) 참조.

의 일환이다. 서로 간의 타당한 합의보다는, 상대에 대한 나의 영향력을 자기 존재의 더 큰 척도로 삼는다.

이러한 전략적 행위는 내 앞의 대상을 일종의 사물처럼 만든다. 전략적 행위의 대상은 내 앞에서 나를 위한 수단일 뿐, 있는 그대로의 인격이 아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정치적 차원의 ‘권력’, 경제적 차원의 ‘화폐’는 상대를 내 기대에 맞추게 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권력이나 화폐를 이용해 전략적으로 상대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전략적 수단을 이용하는 행위로 인해 사회는 ‘생활세계’로 기능하기보다는 차가운 ‘체계’가 더 강화된다.

IV. 생활세계와 체계

하버마스의 표현을 빌려오면, 언어적 의사소통행위로 사회화, 사회통합, 문화적 전승이 이루어지는 사회영역이 이른바 ‘생활세계’(Lebenswelt)이고, 화폐나 권력으로 행위를 조정하는 경제와 행정 등의 영역이 ‘체계’(System)이다.¹¹⁾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생활세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근대에 들어 화폐와 권력으로 인간의 행위를 조정하는 경향이 더 커졌다. 그러면서 생활세계는 도리어 억압되고, 그만큼 차가운 체계가 형성된다. 생활세계와 체계가 분리되고, 권력이나 화폐가 언어적 합의를 대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제정한 법으로 ‘체계’를 간

11) 정선기, 『문화사회학 가치의 제도화와 생활양식』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 89; 김재현, “하버마스에서 공론영역의 양면성,” 이진우 엮음,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 (과주: 문예출판사, 1996), p. 132.

접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이 때 법이라는 것도, 법학자 로베르트 웅거(Robert Unger)의 표현을 빌리면, ‘사제로서의 기능’보다는 ‘예언자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웅거에 의하면, ‘법의 사원’에서 기성의 지배적 법리를 수호하는 법률가가 일종의 ‘사제로서의 법률가’에 해당한다면, 예언자로서의 법률가는 더 좋은 민주주의적 가능성과 이상적 삶에 대한 원대한 기대를 가지고 대안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을 하는 자이다. 사제로서의 법률가는 모순적이고 결함이 많은 현실을 기존 법 체계 안에 조작적으로 통일시키는 방식을 따름으로써 ‘체계’에 공헌한다면, 예언자로서의 법률가는 합리적 ‘공론의 장’에 기반한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맥락에서 법률가가 예언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때 이른바 생활세계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웅거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¹²⁾

하버마스의 표현으로 다시 돌아오면, 체계가 경제와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언어적 의사소통으로 확립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한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세계가 지닌 의사소통의 합리성으로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가 말하는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예를 들어 해결하면 다음과 같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세월호를 인양하는 문제에 있어, 당시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세월호 인양을 반대하는 논리로 ‘비용’의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 문제는 생활세계에서의 생명이 가진 의미나, 생명의 존엄성,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겠다는 일종의 상징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인양을 반대했던 국회의원은 이런 의미와 상징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 환원해버렸다. 이런 구체적인 사건은 최소투자 최대이익이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체계의 논리가 상징과 의미의 영역인 생활세계의 논리에 침투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생활세계

¹²⁾ Robert Unger, 이재승 역, 『비판법학운동』 (서울: 엘피, 2019), pp. 27~28, 143~146.

의 식민지화를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¹³⁾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사물화이기도 하다. 인간이 인간을 사물화 내지 수단화하는 흐름을 바로 잡는 근간이 합리적 의사소통이다. 우리의 주제대로 하면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화 참여자들이 합의를 지향하기는 하지만, 합의 자체가 대화의 목적은 아니다. 아무리 합의라고 해도, 어떤 특정 목적을 대화 상대자들의 형편보다 앞세우는 한, 대화의 행위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수단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략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생활세계’에 공헌하기보다는 ‘체계’를 강화시키는 도구가 된다.

이와 반대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란 현 상황, 상대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와 연결된다. 이런 자세야말로 대화의 시작이고 소통의 토대이다. 대화는 ‘인간 대 인간’으로 있는 그대로 마주함으로써 성립된다. 이것은 내 앞의 너를 너 그대로 보면서 비로소 내가 나로 성립한다는 부버의 철학적 입장과 상통한다.

V. 듣기의 평화론

이렇게 상대의 말을 ‘들음’으로써 타협이 이루어지고 자신도 변화 및 성숙해진다. 대화는 일방적 말하기가 아니다. 일방적 말하기는 대화라 아니라 독백(mono-logue)이다. 대화는 서로 듣고 말하는 상호적 행위의 형식을 하고 있다. 듣고 말하기는 둘 다 불가결하지만, 이 가운데 더 중

13) 김덕영, 『사회의 사회학』 (서울: 길, 2016), p. 443.

요한 하나를 꼽으라면 ‘듣기’이다.

말하기는 내 밖으로 내보내지만, 듣기는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 들음으로써 내가 이해되고 그렇게 이해되는 만큼 나도 변화한다. 나의 변화의 동력은 너의 말을 듣는 데 있다. 나의 변화가 결국 합의로 이어지는 동력이 된다. 나의 변화가 설령 나의 손해로 이어질까 염려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그 참여자 및 관계자들 모두에게,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대화를 성공으로 이끈다. 듣기가 대화의 근간이다.

가령 조선의 성왕인 세종은 여느 왕보다도 회의를 자주 했고, 신하들과 대화를 많이 했다. 세종은 고전의 언어에 대한 토론을 통해 그 메시지를 현실 정치에 적용하는 ‘경연’을 월평균 5회 꼴로 개최했는데, 이는 역대 다른 어떤 왕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다.¹⁴⁾ “세종은 신하의 말을 끝까지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한편, ‘경청’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반대자들의 마음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서 좀처럼 화를 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했으며, 충분히 토론하면서도 회의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했다. 회의 결과가 현실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 참가자들을 믿어주고 결정된 내용을 신하에게 일임하는 방식을 취했다.¹⁵⁾ 듣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실에서, 특히 현실 정치나 외교에서는 말하기를 더 중시한다. 말로 상대를 설득하거나 제압해, 나, 우리, 자기집단의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이다. 전술했듯이, 하버마스가 ‘생활세계가 ‘체계’에 의해 침식당하는 현상을 ‘생활세계의 식민화’라고 명명했는데, 그것은 ‘체계’의 근간

14) 박현모, “세종의 회의 운영 방식”, 대화문화아카데미 편, 『소통문화의 지형과 지향: 소통을 낳는 대화, 대화를 낳는 문화를 위하여』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0) 참조.

15) 위의 글, p. 224, 230.

인 도구(적 합리)성만을 확대시키면서 생활세계 내의 의사소통적 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말하기만을 중시하는 태도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를 도구화시킨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려고만 하면, 서로 하려는 말 속에 전제되어 있는 ‘자기중심성들’끼리 충돌하며 팽팽한 긴장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힘의 역학에 따라 파괴적 갈등도 일어난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 이러한 이치이다.

가령 김정은의 평화와 트럼프의 평화가 충돌하는 이유는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평화를 상정하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일단 논외로 한다면,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끌기 위해 상시로 힘을 키운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말을 평화학의 용법과는 반대로 사용하면서, 일본 중심의 ‘힘에 의한 평화’를 재구축하려는 시도는 전형적으로 목적중심적, 전략적, 도구적 행위이다. 실제로 아베 정권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영어로는 proactive peace strategy(선도적 평화 전략) 또는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선도적 평화 공헌)로 표현하면서, 마치 일본이, 좁게는 아베 정권이 평화에 기여라도 하는 양 선전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하버마스의 표현을 빌리면, 합리적 대화가 아니라 생활세계를 침식시키는 전략적 행위이다.

대화는 힘에 의한 제압이 아니다.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표현마따나 ‘적극적 평화’가 구조적이고 문화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힘의 우위에 기반한 일방적 말하기로는 이루기 어렵다. 정말로 평화를 원한다면, 대화 상대자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나 ‘적극적 평화’는 말하기에 머물지 않고 듣기의 기술을 요구한다. 듣기야말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행위이기예, 거기서 적극적 평화의 기초가 다져진다. 폭력이 구조화하거나 문화화하는 이유는 ‘힘에 의한 평화’를 당연시하는 데서 형성된다. 폭력의 구조화는 따뜻한

‘생활세계’가 아니라 차가운 ‘체계’가 견고해지는 현상이다. 거기에는 ‘인간의 얼굴’이 없다. 대화는 그 원리에 충실할수록 세계를 인간화시킨다. 이처럼 평화는 먼저 들으면서 갈등을 지양하고 합의로 나아가는 대화의 과정을 근간으로 한다.

VI. 속의민주주의, 아일랜드 헌법회의의 경우

물론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단박에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가까운 사람들 간의 일상적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이해관계가 얽힌 심각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가령 어떠한 ‘사실판단’에 관한 주장보다는 ‘가치판단’에 관한 주장을 대화의 주제로 삼는 경우는 타협이나 합의가 더 어렵다.¹⁶⁾ 사실판단은 벌어진 사실을 확인하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행위인 데 비해, 가치판단은 판단하는 이의 인식론, 세계관, 나아가 구체적 도덕적 실천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쉽사리 합의로 이어가기 힘들다.

이처럼 정당화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대화는 지난한 시간을 요하기도 한다. 대화의 주제가 복잡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랫동안 충분히 의논해야 한다. 이러한 대화는 속의(deliberation)의 과정이기도 하다. 개인들 간 대화 행위는 물론 특히 공공의 의제를 다루는 대화일수록 속의의 과정이 요청된다. 속의는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 다수가 참여해 특정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과정이다. 하버마스는 이렇게 말한다.

16) 윤선구, “합리적인 의사소통”, 대화문화아카데미 편, 위의 책, pp. 30~31.

“토의 정치의 절차가 민주주의 과정의 핵심을 형성한다.” “토의 과정을 통해 걸러지는 정치적 의사소통은 이러한 생활세계의 자원들에, 그러니까 자유로운 정치문화와 계몽된 사회화, 그리고 무엇보다 형성하는 결사체들의 주도적 발의에 의존한다.” “이 토의의 장 속에서 사회 전체와 관련되고 규제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에 관해 일정 정도 합리적인 의견형성과 의지형성이 일어난다.”¹⁷⁾

비인간적 ‘체계’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시민사회의 적극적 태도가 합리적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럴 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주의적 ‘공론의 장’이 확보된다. 공공의 의제와 관련된 속의가 이러한 공론의 장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속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이다.

속의민주주의의 사례는 아일랜드에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시민 참여로 구성된 ‘헌법회의(The Convention on the Constitution)’에서 잘 볼 수 있다.¹⁸⁾ 2011년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헌법 개정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이래, 2012년 7월 아일랜드 상하원의 의결로 헌법회의가 구성되었다. 헌법회의의 구성원들은 기간 중 급여나 보수는 없이 실비로 활동비만 지원받았다. 헌법회의의 구성절차를 살펴보면, 중립적인 의장 1인과 여러 정당 등 모든 그룹에서 의석 비율대로 선발된 정치인 33명,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을 안배해 추첨으로 선발된 66명(남여 33인 각각 동수)의 시민 핵심 패널(core panel)로 구성된 회의체였다. 시민 예비 패널(shadow panel) 66인도 별도로 두었다. 헌법회의가 헌법 개정 시안 18개를 제출할 때까지 각 지역 단위에서 관련 회의를 번갈아

17) Jürgen Habermas, 한상진 외 역, 『사실성과 타당성』(서울: 나남, 2010), pp. 398~399; p. 405, p. 401에서 발췌 인용했다.

18) 이지문, “시민주도형 개헌사례와 과제,” 『시민이 직접 쓰는 개헌안, 어떻게 만들 것인가』(6월민주포럼 외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 2017.7.19) 참조.

개최했고 회의 내용은 인터넷 실시간 중계 형식으로 일반에게 공개했다.

이상의 회의를 유지하는 기본 원리는 물론 지속적 대화였다. 구성의 원칙을 합의하는 데도 대화가 필요했고, 100명의 회의체가 각종 현안을 결의해가는 과정도 대화였다. 말하고 듣는 대화의 과정이 공평하게 교차하면서 합의가 일어나고, 갑론을박하던 여론의 조화로 이어졌다. 정부나 의회가 헌법회의의 권고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4개월 내에 헌법회의의 권고사항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회의의 결의 사항 가운데 대통령 출마자격을 35세에서 21세로 하향 조정하는 규정과 동성결혼 허용 여부를 논의한 뒤, 국민투표에 부처 최종적으로 ‘동성결혼 조항’이 통과되었다. 정치인과 시민이 1년 4개월 간 동안 시도한 숙의 과정은, 거기서 도출된 결과가 무엇이나와 상관없이, 대화의 역사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VII. 대화의 종류와 중재자의 역할

물론 숙의가 대화의 전부는 아니다. 대화의 스펙트럼은 넓다. 대화에는 농도 혹은 밀도의 측면에서 느슨한 형태의 일반적 대화도 있고, 좀 더 전문적인 갈등 해결 프로세스도 있다. 일상사를 다루는 편안한 소통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숙의와 같은 대화는 후자에 해당한다. 또 대화의 목적의 측면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타협으로서의 대화가 있는가 하면¹⁹⁾ - 물론 바람직한 형태의 대화라고 하기는 힘들다 -,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 대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²⁰⁾ 이 모든 것이 대

19) 김연철, 『협상의 전략』 (서울: 휴머니스트, 2016).

화이기는 하되, 이 글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대화는 숙의는 물론이거니와 밀도 있는 ‘촉진적 대화’(facilitated dialogue)와 같은 형태이다.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한 시민 참여의 대화는 물론이거니와, 중재자가 포함된 갈등 해결 프로세스와 같은 것이 전형적인 촉진적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일이 복잡하게 꼬여 있을수록, 당사자들 간 힘의 역학 관계가 불평등할수록 중재자가 더 필요하다. 중재자는 단순히 대화의 상대자를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는 정도에 머물지 않는다. 그저 회의의 의장이나 사회자 수준을 넘어, 대화를 기획 및 구성하고, 관련자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질서를 잡으며, 상보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힘의 불균형이 심하면 약자를 좀 더 후원하고, 대화의 균형을 잡아간다. 특히 대화 관계자들이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일수록 쟁점을 규명하고 문제를 풀어가며 합의 및 화해의 단계에 이르도록 조정자 역할을 한다.²¹⁾

갈통(Johan Galtung)이 여러 종교의 가르침에서 힌트를 얻으면서 갈등 해결을 위한 ‘초월방법’(Transcend Method)이라는 것을 제시한 바 있는데,²²⁾ 그 핵심은 갈등 당사자들이 상생(win-win)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상위의 가치를 제공하며 이끌어갈 때 갈등이 해결되어간다는 것이다. 중재자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안을 다루면서도 상위의 상생적 가치와 대안을 제시하고 점점으로 인도할 때 갈등 당사자들도 대화와 타협, 그리고 갈등 전환의 길로

²⁰⁾ Nelson Mandela, 윤길순 역, 『나 자신과의 대화』(서울: RHK, 2013)에서 따온 말이다. 이 책은 자신과의 대화 방법론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²¹⁾ 강영진,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과정과 진행자의 역할”, *대화문화아카데미* 편, 앞의 책, pp.119~121.

²²⁾ Johan Galtung, “Conflict Transformation by Peaceful Means(The Transcend Method)”, *United Nations Disaster Management Training Program*(2000); Bishnu Pathak, “Johan Galtung’s Conflict Transformation Theory for Peaceful World”, *Transcend Media Service* 2016, 8, 29, (<https://www.transcend.org/tms/2016/08/johan-galtungs-conflict-transformation-theory-for-peaceful-world-top-and-ceiling-of-traditional-peacemaking/>)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화를 통한 합의로 이끌기 위해, 중재자에게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그 차이를 풀어가는 세심함도 필요하다. 가령 갈등이 증폭되어 분노 혹은 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 화에도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인이 화를 내는 경우는 “상대방을 가해하거나 힐책하는 데 있기보다는 자신의 화난 심정을 ‘전달’함으로써 상대방부터 공감과 수긍을 얻어내고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때가 많다.”²³⁾ 일본이나 서구 문화에서 화(anger)가 “상대에 대한 적대감을 의미”하는 것과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화’의 의미에 대한 문화적 상황 혹은 차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문화권에 속한 이들 간에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고, 화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복잡한 기제가 작동하는 대화일수록 현명한 중재자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VIII. 북미 대화와 한반도

어떻든 대화에는 중재자가 중요하다. 힘의 균형이 달라 어느 한쪽이 선뜻 대화를 요청하기 힘든 경우일수록 더욱 그렇다. 북미 간 대화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섰던 것도 북한과 미국 간 힘의 역학 관계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상 미국보다는 북한이 더 대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며,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주변국보다는 한국이 평화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면서 가져올 평화가 한반도 전역에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 필요로 하는 자가 중재

²³⁾ 최상진,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2002), p. 359.

자로 나서고, 필요한 자가 대화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나, 2018년 1월, 북한의 김정은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 4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면서 평창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일시 중단하자고 선제적으로 제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그리고 북한이 실제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도록 미국은 각종 대북 제재 규정들에 가능한 한 예외 조항을 만들어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그에 호응하며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남북미 관계는 급진전되었다. 올림픽 이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한미연합훈련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이해해달라며 북측을 진심으로 설득했고, 북한이 수용하면서 다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의 3차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다. 특히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중에는 조연 역할을 자처하면서 북미 회담의 진행을 촉진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대통령 덕분에 평화적으로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문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중재자가 어려운 대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절히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IX. 대화의 평화적 구조와 평화다원주의

이렇게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평화와 직결된다. 물론 접점을 찾는 과정이 늘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남북 및 북미 간 대화가 접점을 찾기는커녕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강자의 자기중심성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없이 접점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대화의 과정, 특히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평화의 길이다. 상이한 입장들이 만나 공통의 지점을 확인해가는 과정은 차이로 인한 갈등을 차이들 간 조화로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성들 간에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야말로 평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대화는 평화를 구체화시키는 길이며, 평화는 대화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대화가 상이한 두 주체 간의 접점을 산출하며 이들 간 갈등을 줄이는 형태로 평화를 만든다. 대화는 평화로 가는 과정이자 수단이다. 그 과정과 수단이 평화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대화가 평화의 구조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평화에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대화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평화의 조성 및 구축 과정 역시 대화의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평화의 구성 주체가 여럿이라는 뜻이고, 그 여럿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이 지금까지 본대로 대화의 주체와 중재자들이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과 같다는 뜻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평화마저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려는 ‘자기중심적 평화주의’(ego-centric pacifism)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자기중심적 평화주의는 평화라는 목적을 자기중심적 수단을 써서 구체화하려는 태도이다. 목적은 동일한 평화에 두고 있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은 다양한 자기중심성들뿐이다. 그러다 보니 평화라는 이름의 갈등과 폭력이 지속된다.

현실에서 평화는 대문자 단수(Peace)가 아니라 소문자 복수(peaces)라는 사실을 일단 긍정해야 한다. ‘평화’가 아니라 ‘평화들’이다. 대문자 단수로서의 평화는 다양한 평화들 간의 대화를 통해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의 형태로만 드러난다. 그렇게 상위의 공통적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대화를 통해 다양한 입장들 간의 조율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평화이다. 이러한 입장을 ‘평화다원주의’(pluralism of peaces)라고 할 수 있다.²⁴⁾ 여러 가지 평화들이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상호 긍정을 통한 상위의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행위가 대화인 것이다.

여러 평화들 간에 조화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상이한 힘의 역학 관계에서 오는 피해, 즉 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없애거나 줄여가야 하는 것이다. 평화는 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애당초 그러한 상처를 만들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평화구축(peace-building)은 이러한 과정을 집약하고 있는 용어이다. 폭력을 지양하며 그만큼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행위의 근간에는 대화가 있다. 이를 통한 점점의 모색, 즉 합의가 평화의 기초이다. 그런 점에서 평화가 대화적 구조를 할 뿐만 아니라 대화 역시 평화적 구조를 한다.

이 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상처와 아픔을 축소시키는 대화여야 한다는 뜻이다. 평화운동가 로젠버그(Marshall Rosenberg)는 대화 자체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NVC(Nonviolent Communication), 즉 ‘비폭력적 소통’ 개념을 제시하고 확산시켜 왔다. 그에 의하면, 비폭력적 소통의 근간은 ‘자비로운 연결’(compassionate connection)이다. 언어 자체보다

24) 이찬수, 『평화와 평화들: 평화다원주의와 평화인문학』, pp. 57-62.

그 언어에 담긴 ‘마음’이 더 중요하며, 소통도 연민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⁵⁾ 그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기초라는 것이다. 이렇게 대화는 평화의 다른 얼굴이고, 평화는 대화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대화의 심층에서 평화 지향성을 읽을 수 있고, 평화의 심층에서 대화의 구조를 읽을 수 있게 된다. 심층에서 통하는 보편적 접점을 찾아가는 일이야말로 대화의 목적이자, 평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X. 남북공동성명의 의의와 정치적 대화의 한계

그 접점 혹은 공통 지점을 객관화하는 증거 중 하나가 ‘협약문’이다. 일반적으로 협약문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인 내용을 주로 담는, ‘법적인 평화’ 개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지만,²⁶⁾ 분명한 사실은 협약문으로 인해 쌍방이 동의하는 지점이 일정 부분 구체화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드러나는 동의의 지점이 평화의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협약의 과정 자체가 평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대화의 한 가지 결실로서의 평화 협정은 갈등 혹은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상호 계약이며, 그 계약이 평화의 가능성을 구체화시키는 기초이다.

가령 베트남전을 전후하여 대치 분위기가 더 고조되던 남북 간에 상대적으로 만남이 잦아지게 된 배경에도 ‘7.4 남북공동성명’을 낳은 대화가 있었고,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등 각종 합의문의 역사가 있다. 분단 이후 최초의 정상급 합의였던 7.4 남북공동성

²⁵⁾ Marshall B. Rosenberg, 캐서린 한 역, 『비폭력 대화』 (서울: 바오, 2004), p. 4, 18~19, 24.

²⁶⁾ 김연철,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파주: 창비, 2018), pp. 300~301.

명이 이것을 잘 보여준다.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가 최두선 총재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화를 하자는 제의에 북한이 호응하면서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었다. 북한은 1972년 8월까지 25차례의 예비 회담을, 1972년 8월부터 1973년 7월까지 7차례의 본회담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자(남측에서는 중앙정보부 협의조정국장 정홍진, 북측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직속 책임지도원 김덕현) 간 비밀 접촉이 남북을 오가며 진행되었다. 그 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정홍진이 갔던 경로를 따라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나는 등 정치적 대화가 지속되었다. 그 결과 1972년 7월 4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남북공동성명 제6항 및 1972년 11월 4일에 합의한 「남북조절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한 정치적 협의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도 설치되었다. 남북조절위원회는 1972년 8월 북한이 중단을 선언할 때까지 공동위원장 회의 3회, 본회의 3회 등 총 6회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비록 양측의 입장 대립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통일을 주제로 하는 남북 간 첫 대화의 결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 당시 남북관계를 “대화가 있는 대결의 시대”로 규정했었는데, 1970년대 남북 간에는 대결 구도는 그대로면서도 본격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을 구체화시킨 시대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²⁷⁾ 실제로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은 이후 남북한 간 접촉과 대화의 기본 지침으로 작용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 대화의 이론적 원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적용되었는지 일일이 파악하기는 힘들다. 전술했던 이상적 대화의 논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남북 간 수십 차례 왕

²⁷⁾ 이상, 위의 책 참조.

래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남북 간 공동의 지향이 기존의 갈등을 넘어선 사례인 것은 분명하다. 상호적 대화의 결과인 것이다.

XI. 평화의 중층성, 제네바합의와 햇볕정책

대화가 타협을 이끌어내고, 타협은 전쟁을 멈추며, 역사도 바꾼다. 북미 간 제네바합의도 그 사례이다. 1994년 10월 1일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른바 ‘제네바합의문’이 발표되었다. 북한의 IAEA 탈퇴로 드러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실제 전쟁의 가능성으로 치닫던 1994년 5월~6월, 북한은 미국이 경수로를 건설해준다면 핵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을 해체할 수 있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미국의 셸리그 해리슨이 평양에 가서 북한의 진의를 파악했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과 회담했다. 카터가 김일성에게서 핵프로그램을 동결할 의사를 확인하면서 북미간 대화는 급진전되었다. 이것이 10월 제네바합의로 이어졌고, 이 합의는 1994년 여름 한반도 전쟁 위기를 평화적으로 수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물론 제네바합의의 실질 이행 과정에는 한계도 있었다. 합의 이후 미국의 의회가 공화당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민주당 클린턴 정부에서 약속했던 대북 경수로 건설을 위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합의문은 문안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자 북한에서 미사일 대포동1호의 발사 실험으로 대응했고, 위기가 다시 고조되었다. 이즈음 정권을 잡은 한국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남북미 간 대화의 분위기가 살아났지만, 합의문의 이행에는 여전히 한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그로 인한 합의가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분명하다.²⁸⁾

이러한 합의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물론 합의는 어렵고 대화의 과정은 종종 복잡적이고 중층적이다. 가령 대화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듣기의 기술이지만, 현실에서 대화 참여자가 무조건 듣기만 할 수는 없다. 듣기 역시 말하기를 전제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에서 듣기와 말하기는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복합적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평화도 마찬가지로이다. 평화는 획일적 방법과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유지(peace keeping), 평화조성(peace making), 평화구축(peace building)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단계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복합적이거나 동시에 작동하기도 한다.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역시 그 개념적 차이와는 달리 실제로는 분리되지 않는다. 이들은 융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온 세계, 전 인류가 같은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은 아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때로 일시적이거나 ‘힘에 의한 평화 유지’가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 평화’의 상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힘이 있으면서도 먼저 대화를 요청하고 힘을 약자에게 나누어주기도 한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은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햇볕정책이라는 말은 북한의 반발과 그 은유적 모호함 때문에 ‘포용정책’으로 변경되었지만, 어떤 용어든 핵심은 ‘접촉을 통한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변화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면서 냉전적 남북관계를 탈냉전으로 전환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 접촉을 통한 상호 이해의 확장과 차이의 인정을 통한 공존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햇볕정책은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의

²⁸⁾ 이삼성,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파주: 한길사, 2018), pp. 220~265 참조.

²⁹⁾ 김연철,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파주: 창비, 2018), pp. 207~208.

철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햇볕정책은 분단이라는 현실, 남북의 서로 다른 시간,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먼저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먼저 손을 내밀고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정책이었던 것이다.

XII. 회복적 정의의 평화학적 의미

물론 햇볕정책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남북 간에 끊일 듯 이어져온 대화 분위기의 연장이다. 여전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물리적 폭력을 줄여왔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이 없는 세상마저 꿈꾸게 된 힘은 대화였다. 대화를 통해 점점을 추구하는 과정에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상처의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해결책도 보인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대화의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다. 위안부, 강제징용 판결,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벌어져온 팽팽한 긴장은 대화 상대자들이, 특히 일본이 대화의 원리를 간과한 데서 벌어진 일이다. 물론 한국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사유방식, 문화적 판단 양태 등에 대한 상호 물이해가 기초에서부터 상승작용을 하면서 대화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사건의 관계자 모두의 화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대화가 평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의미가 크다. ‘회복적 정의’는 기존의 ‘응보적(retributive) 법의 운용(justice)’ 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메노나이트 계열의 평화운동가들이 주창하면서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사법 패러다임이다.³⁰⁾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와 공동체 모두의 회복을 이루려

는 새로운 시도이다. 법 앞에서의 평등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평등의 이름으로 불평등을 유지하는 기존 사법 원리의 한계를 의식하고서,³¹⁾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가 잘못을 시정하고 화해와 안전을 촉진하는 해결책을 찾기”에 집중한다.³²⁾ 상처의 원인을 쌍방이 치유하고 결국 화해로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과정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회복,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이루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전환 효과(transformative effect)까지 얻는다.

이러한 회복적 정의의 이론은 갈등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대화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대화는 누군가의 책임을 묻기보다 왜 지금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묻고 듣는다. 오랜 갈등과 상처로 인해 쉽사리 풀리지 않는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남북문제의 세부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일을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더 당면한 과제는 큰 힘으로 작은 힘을 압도해 피해와 아픔을 불러 일으켜온 저간의 행위 -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든 - 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남북 간에든 북미 간에든, 나아가 한일 간에든, 어디선가 자행되는 폭력은, 그것이 물리적 폭력이든 구조적 폭력이든, 비판 및 극복되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축소시켜가야 한다. 이것이 평화 연구와 운동의 근간이다.

자기중심적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모든 행위는 비판하고 극복해가야 한다. 평화학은 힘 있는 이가 약자의 현실에 대한 공감(empathy)을 동력으로 약자의 아픔으로 들어갈 것을 요청한다. 그 공감으로 약자를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하고 독려하는 것이 평화학의 핵심이다. 폭력

30) Howard Zehr, 손진 역,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KAP, 2010)가 이 분야 대표적인 책이다.

31) 위의 책, p. 99.

32) 위의 책, p. 207.

을 줄이기 위한 평화적 태도와 지향이 현실 정치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개입의 기본적 방법이 대화이다. 소통이고 속의이다. 아울러 이런 대화를 진작시키기 위한 중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화는 평화에의 길이자 평화를 열어주는 문이다. 대화의 원리는 평화의 형성과정과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잘 보여준다. 대화의 길에는 종종 암초도 있고 굴곡도 있지만, 한반도에는 분명히 대화로 인한 평화의 기운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중이다.

■ 접수: 2019년 10월 28일 / 심사: 2019년 11월 25일 / 게재확정: 2019년 11월 25일

【참고문헌】

- 김덕영. 『사회의 사회학』. 서울: 길, 2016.
- 김연철. 『협상의 전략』. 서울: 휴머니스트, 2016.
- .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파주: 창비, 2018.
- 김재현. “하버마스에서 공론영역의 양면성.” 이진우 엮음.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 파주: 문예출판사, 1996.
- 대화문화아카데미 편. 『소통문화의 지형과 지향: 소통을 낳는 대화, 대화를 낳는 문화를 위하여』.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0.
- 上田閑照. 『禪佛教-根源的人間』. 東京: 筑摩書房, 昭和 48.
- 이삼성.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파주: 한길사, 2018.
- 이찬수. 『평화와 평화들: 평화다원주의와 평화인문학』.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6.
- 李贊洙. “平和はどのように成り立つのか: 減暴力と平和構築,” 『リーラー「遊」』, vol. 10, 東京: 文理閣, 2018.
- 장춘익. “하버마스: 비판적 사회이론의 정립과 정치적 실천의 회복을 위한 노력.” 『사회비평』 11 (1994).
- 정선기. 『문화사회학 가치의 제도화와 생활양식』.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최상진.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2002.
- Buber, Martin. 표재명 역. 『나와 너』. 서울: 문예출판사, 1988.
- Connolly, John M. & Thomas Keutner. 이유선 역. 『해석학과 과학』. 서울: 민음사, 1993.
- Gadamer, Hans-Georg. *Truth and Method*. New York: Crossroad, 1982.
- Habermas, Jürgen. 장춘익 역. 『의사소통행위이론 2』. 서울: 나남, 2015.
- Habermas, Jürgen. 한상진 외 역. 『사실성과 타당성』. 서울: 나남, 2010.
- Heidegger, Martin. 신상희 역. 『숲길』. 파주: 나남, 2008.
- Mandela, Nelson, 윤길순 역. 『나 자신과의 대화』. 서울: RHK, 2013.
- Pathak, Bishnu. “Johan Galtung’s Conflict Transformation Theory for Peaceful World.” *Transcend Media Service* 2016,8,29, (<https://www.transcend.org/tms/2016/08/johan-galtungs-conflict-transformation-theory-for-peaceful-world-top-and-ceiling-of-traditional-peacemaking/>)

Rosenburg, Marshall B. 캐서린 한 역. 『비폭력 대화』. 서울: 바오, 2004.

Unger, Robert. 이재승 역. 『비판법학운동』. 서울: 엘피, 2019.

Zehr, Howard. 손진 역.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KAP, 2010.

Peaceful Structure of Dialogue

Yi, Chan Su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Dialogue(Communication) is a process in which different standpoints reach a verbal agreement. The process of clarifying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after the agreement has been made is also within the realm of dialogue in a broad sense. Even if a dialogue does not always lead to a reasonable-agreement or a concrete implementation, dialogue and agreement reduce some conflicts in any way. As much as conflicts decrease, peace shows itself. The agreed points among dialogue participants create an opportunity for reducing conflict and increasing peace.

In hopes of the path toward peace, this article looks at what dialogue is and how it contributes to peace.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borrows the ideas of Martin Buber, Hans-Georg Gadamer, and Jürgen Habermas. Among them, this article applies the Habermas' main theories - reasonable 'communication,' 'strategy' for maximizing one's influence, the 'life world' made by communication, and 'system' controlled by the strategy - to the process of peaceful dialogue.

As socio-political examples of these dialogues(communications),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the 'Irish Constitutional Convention', 'Geneva Agreed Framework', '7 · 4 North-South Joint Statement'

and 'Sunshine Policy' are reviewed in their respective contexts. To facilitate the ongoing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to serve as an intermediary for dialogu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article examines what should South Korea's approach be, as the proper mediator in the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hrough this, the process and logic of dialogue contributing to peace will be outlined in terms of 'peaceful structure of dialogue' as well as 'dialogical structure of peace'.

Keywords: Dialogue, Communication, Strategy, Mediator, Peace, Restorative Justice

이찬수(Yi, Chan Su)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강남대 교수, (일본)코세이가쿠린 객원교수, (일본)난잔종교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을 지냈다. 종교철학에 기반한 평화인문학의 정립을 연구과제로 삼고 있으며, 그동안 『평화와 평화들』, 『다르지만 조화한다』, 『불교와 그리스도교 깊이에서 만나다: 교토학파와 그리스도교』, 『녹색평화란 무엇인가』(공저), 『세계의 분쟁』(공저), 『탈사회주의 체제 전환과 발트3국의 길』(공저), 『아시아평화공동체』(편저) 외 다수의 책과 논문을 썼다.

